

“겨울철 서비스업종 산재 주의”

겨울철 대설기간에는 서비스업종의 재해 및 3대 산업재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날씨와 산업재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연구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를 겨울철 정상기간, 대설기간, 대설복구기간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겨울철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기후요인은 폭설과 한파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재해, 유형별로는 도로교통사고, 넘어짐 사고, 뇌심혈관질환 등 3대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은 대설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기간 중 재해자가 152명이 발생한 반면, 대설기간 중에는 178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17.1%의 재해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제조업의 경우에는 대설기간(172명)이나 정상기간(180명)보다도 대설복구기간(210명)에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은 대설기간(61명) 및 복구기간(130명) 모두 정상기간(143명)보다 재해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겨울철에 공사현장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해유형별로는 대설기간 중에 도로교통사고가 48.7%, 넘어짐사고가 4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설복구기간 중에는 무리한 동작이 77.8%, 넘어짐사고가 40.4% 증가했다. 그밖에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최근 10년간 재해자(1,580명)를 분석해본 결과, 실내의 기온차가 큰 12월과 1월에 각각 평균 121명과 106명의 재해자가 발생, 월평균(99명)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산업안전보건정책관에 문기섭 前 대전지방노동청장 발령

고용노동부는 1월 8일자로 산업안전보건정책관에 문기섭 전 대전지방노동청장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신임 문기섭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사회학 학사)와 서울대대학원(행정학 석사), 영국 워릭대(노사관계학 석사)를 졸업했다.

1989년 행정사무원(행정고시 32회)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장애인고용과장, 근로기준과장, 청년고용과장, 안전보건정책과장, 대변인 등 고용노동부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올해 평균 산재보험료율 1.77%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산재보험의 업종별 평균 보험료율을 보수총액의 1.77%로 결정하고 이를 최근 고시했다. 이는 2010년 평균 보험료율 1.80% 보다 1.7% 인하된 것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 경비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구분·고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62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고시됐다. 올해 최저 요율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보수총액의 0.6%다. 최고 요율 업종은 석탄 광업으로 보수총액의 35.4%다.

전년도에 비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 광업 20.1%(14.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14.3%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2.2%(12.0% ↓) 등 총 25개 업종이다. 반면 전년도에 비해 인상된 주요 업종은 어업 32.8%(14.7% ↑), 제재업·베니어판 제조업 8.4%(10.5% ↑), 코크스·석탄가스 제조업 3.3%(13.8% ↑) 등 총 13개 업종이다. 인상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업종별로 보험급여지급률과 3년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부담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된 배경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004년부터 꾸준히 요율을 인상 또는 유지해오면서 최근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들어섰다”라며 “여기에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고 근로자 증가에 따라 보수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체와 총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20~50%까지 할증 받거나 할인받게 된다.

무재해 인증제도 대폭 변경

올해부터 무재해 인증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업종 규모별로 사업장들이 평균적으로 재해자 1명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으로 정의하고 무재해 1배수의 목표기간을 규모에 관계없이 ‘목표시간’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설업종의 경우 공사규모·종류별로 무재해 ‘목표시간’이 정해졌으며, 건설업 이외의 업종은 299인 이하는 ‘목표일’, 300인 이상은 ‘목표시간’ 단위로 무재해 1배수 기준이 설정됐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설업은 소업종별로 50억 미만, 50~100억 미만, 100~300억 미만, 300~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목표시간이 설정되며, 건설업 이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부터 1,000인 이상까지 18개의 세분화된 목표시간이 설정된다. 단,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업 이외 업종에서 규정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무재해 1배수 목표를 매년 설정하여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선안에는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재해는 무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여기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출장 및 외부기관의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회식중의 사고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범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등이 포함된다.

위험성 평가 올해 15,000개소 확대 적용

올해 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위험성 평가)이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을 지난해 3,000개소에서 5배 증가한 15,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확정했다. 총 15,000개소의 사업 물량 중 공단과 민간대행기관에서 각각 7,500개소를 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난해 시범 산업단지지를 관할했던 지방청 또는 지청의 전체 관할 사업장으로 이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또 지난해의 경우 제조업 위주로 실시됐지만 올해에는 제조업 외에 건설업과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프라를 구축해나간다는 취지로 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 외에도 계층별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지난해 (405,000명)보다 35,000명 확대한 440,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안전 강화 통해 국격 높인다

앞으로 건설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도 보다 내실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1년도 업무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설안전' 부분에서 올해 국토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사고 유형별 원인 등을 정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관리자나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기적으로 유형별 사고사례와 조치방법 등도 현장에 전파하고, 이에 대한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현장 아직도 안전불감증 '심각'

건설업이 사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

로 나타났다. 또 사고를 유발한 불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으로 각각 '작업과정·절차의 부적절'과 '작업수행 및 절차 미준수'가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나 여전히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09년부터 2010년 3월말까지 발생한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1,170명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사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40.4%)으로 나타났다. 제조업(29.0%), 운수업(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발생형태는 추락(32.3%), 충돌·접촉(22.2%), 전도·전복(10.3%), 협착·감김(9.1%), 낙하·비래(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인물로는 건축·구조물 및 표면이 34.0%, 설비·기계가 26.1%, 교통수단(주로 충돌·접촉재해 관련)이 24.3%로 이들 기인물이 전체의 8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내용별로 보면 상·하역 운전작업이 41.9%를 차지해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한 작업으로 조사됐다. 그 뒤는 기계기구·설비 설치·보전작업(16.7%),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16.6%), 그 밖의 건설관련 작업(7.7%)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사고를 유발한 주요 불안정한 상태는 작업과정·절차의 부적절이 24.9%로 가장 많았으며, 방호조치의 부적절(19.6%), 작업상의 기타고유위험요인(1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불안정한 행동에선 작업수행 소홀 및 절차 미준수가 24.6%를 차지해 사고 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작업수행중 과실(19.2%), 복장·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17.6%), 설비·기계 및 물질의 부적절한 사용·관리(15.6%) 등도 주요 불안정한행동으로 조사됐다.

농업인 '전도'·'근골격계질환' 가장 많아

농작업 관련 손상으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가장 많고, 농작업 관련 질병은 허리 등의 근골격계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작업 재해가 가장 많이 빈발하는 시기는 5~8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작업의 종합적인 재해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조사는 전국 400개 마을, 6,000호 농가의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6개 분야 32항목에 대해 방문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농진청에 따르면 농작업 관련 손상율(사고 및 중독)은 여성(2.9%)보다 남성(8.6%)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4.5%, 60~69세 5.9%, 70세 이상 7.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업 활동이 많은 5~8월에 전체 농작업 관련 손상의 62.8%가 집중됐으며, 시간대로는 오전 9~11시와 오후 2~4시 사이가 가장 많은 66.6%를 차지했다. 농작업 손상 발생형태는 미끄러짐 및 넘어짐 등과 같은 '전도재해'가 27.1%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힘·동작(24.5%), 화재·폭발·파열(8.9%), 충돌·접촉(6.9%), 추락(6.9%), 교통사고(6.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농작업 관련 질병 분포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발생부위는 허리(32.8%), 손·팔·어깨·목(26%), 발·무릎·허벅지(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